

공 개



| | |
|--------------|--------------------------|
| 의안번호 | 제 211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21. 10. 1. (제 18 차) |

의
결
사
항

(주)포휴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도 규 상 |
| 제출 연월일 | 2021. 10. 1. |

1. 의결주문

(주)포휴먼의 제20기(2008.1.1.~2008.12.31.)부터 제21기(2009.1.1.~2009.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포휴먼의 제20기(2008.1.1.~2008.12.31.)부터 제21기(2009.1.1.~2009.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포휴먼에 대한 조치안

| | |
|----------------------|---|
| 지적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08년 41,139백만원, ’09년 42,488백만원)○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08년 7,985백만원, ’09년 10,570백만원) |
| 조치 내용 *1,*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함^{*4} |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고의

- (위반유인)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000는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회사가 일본 및 국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우량회사로 보일 필요가 있었음

- (경영진 인지) 대표이사 000는 회사, 0000 및 000000000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계약서, 발주서, 수출·입신고필증 등 매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분식회계를 주도하였음
- (분식회계 형사재판) 000 등 분식회계 관련자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으로 '15.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등이 확정되었음

* 특경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포함

- ⇒ (舊양정기준)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및 '위법행위가 임직원등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1.가.1),2)]
- ⇒ (新양정기준)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2)]

나.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 고의

- (위반유인) “가.”와 동일함
- (경영진 인지) “가.”와 동일함
- (분식회계 형사재판) “가.”와 동일함
- ⇒ (舊양정기준)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및 '위법행위가 임직원등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1.가.1),2)]
- ⇒ (新양정기준)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2)]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 적용) : 해당사항 없음

*4 ① 회사는 이미 폐업('13.11.30.)되어 소재지를 찾을 수 없음

- ② 대표이사 000 등 분식회계 관련자들은 회사, 0000 및 000000000 재산에 대한 횡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5.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찰 고발은 생략

나.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 | |
|--|---|
| 지적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08년 12,826백만원, ’09년 15,121백만원) |
| 조치 내용 <small>*1,*2,*3,*4,*5</smal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계법인(과실 I → I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지정제외점수 20점 ○ 공인회계사 OOO(과실 I → II 단계)[’08년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공인회계사 OOO(과실 I → II 단계)[’09년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1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감사인이 지분법피투자회사 매출과 관련하여 제품공급계약서 확인, 외부 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
 -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계산검증 및 감액손실 검토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3.나.4)]

<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행위판단 기준) 감사인이 지분법피투자회사 매출과 관련하여 제품공급 계약서 확인, 외부 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
 -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계산검증 및 감액손실 검토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단내용이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3)]
 - (정보의 중요성 기준) 위반금액의 규모배수가 4배를 초과함('08년 16.85배, '09년 20.17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
-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현행 양정기준 적용) : **1단계 감경**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동건 위법행위 이전 2년 이내에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이 없음
- 감경사유 : 1단계 감경
 - 감사인은 (주)포휴먼의 소액주주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액주주 등에게 143억원(손해배상금 114억원, 지연손해금 29억원)을 배상하였는 바, 이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나.3)]

*4 OO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OOO, OOO에 대한 조치 중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은 회사의 폐업으로 조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함

*5 조치근거

- OO회계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 공인회계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4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4항

4. 참고사항

가. 제10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1.9.2.)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주)포휴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포휴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포휴먼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00000000 00

2. 조치내용

☐ 조치 미부과

※ 조치 미부과 사유

- ① 회사는 이미 폐업('13.11.30.)되어 소재지를 찾을 수 없음
- ② 대표이사 000 등 분식회계 관련자들은 회사, 0000 및 0000000000 재산에 대한 횡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5.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찰 고발은 생략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포휴먼은 제20기(2008.1.1.~2008.12.31.)부터 제21기(2009.1.1.~2009.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08년 41,139백만원, ’09년 42,488백만원)

-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회사 대표이사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개의 지분법피투자회사(OOOO, OOOOO)의 재무제표에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후,
- 동 재무제표를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08년 7,985백만원, ’09년 10,570백만원)

-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의 매출·매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①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 권고, ③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①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②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22

-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15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별지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0 000

☐ 000 [제20기('08년) 주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 0000 00 0000 0000 000000

☐ 000 [제21기('09년) 주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 0000 00 000000 0000

2. 조치내용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은 (주)포휴먼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09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2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 지정제외점수 20점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은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은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은 (주)포휴먼의 제20기(2008.1.1.~2008.12.31.)부터 제21기(2009.1.1.~2009.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08년 12,826백만원, ’09년 15,121백만원)

- (주)포휴먼이 허위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감사인 본인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 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별표 제2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직무연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인 지정시 참작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붙임1)

관 계 법 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 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 4.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③ <생 략>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⑦ <생 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 8.~20. <생 략>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 7. <생 략>
- ② <생 략>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5. <생 략>

③~⑧ <생 략>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 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4. <생 략>

② <생 략>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개정 2004.6.16>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개정 2001.4.18>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③ 삭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예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삭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제

제60조(사전통지) ① 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3., 2010. 5. 27.>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60조의2(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본조신설 2006. 9. 13.]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 ③ <생략>

④ 조지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 나. 주권상장법인
 -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사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 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 ⑧ <생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들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조치등의 일시
-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 략>

부칙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 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5. <생 략>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에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 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에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에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 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4. <생략>

② <생략>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22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15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회계감사기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감사의 일반원리)

2.3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은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500 감사증거

1. (목적)

1.2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2.2 감사인은 입증절차부처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재무제표의 경영자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소관부서 | 공정시장과 | 회계조사국 |
| 연 락 처 | 02-2100-2695 | 02-3145-7320 |